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 송영길 조사하나

2021년 전대 과정 현금 살포 혐의…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 이성만 의원은 기각…지목된 의원 20명 수사 가속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이 녹취록과 공범들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

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점이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는 맡은 유장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련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범행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 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며 각 지역 대의원에 송영길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사자로 직접 지목된 현역 의원이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달 국회 회기가 중단된 사이 증거관계를 보강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함에 따라 이번에는 국회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가 열렸다.

검찰이 일단 윤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돈봉투 의혹 수사도 ‘정점’을 향해 한층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의 면면을 규명하는 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20명의 의원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네 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이정근 씨

에게 “인전 돌리고 J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인전 돌’ 중 한 명이 이 의원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른바 ‘송영길계 좌장’으로서 경선 운동 전반을 기획·총괄했다는 점에서, 송 전 대표의 개입·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도 ‘키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기간인 최대 20일 동안 윤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최종 확인하고,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어 송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로 나아가 갈 것으로 관측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박지원 “내년 총선, 해남·진도·완도 선거구 출마”

광주교육청 청소년 정치캠프 특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해남·진도·완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정치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박 전 원장은 6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 (내년 총선) 제 고향(해남·진도·완도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앞서 지난 4일에도 광주지역 일부 언론인들을 만나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면, 마지막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 지역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또한, 이 자리에서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지적에 “올드보이라는 ‘보이’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려면 경험과 경험이 있는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직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소통하지 않아 호남에서도 배척을 받는다”며 “지열한 투쟁과 소통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잇는 정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시 교육청 청소년 정치캠프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인이 되겠다는 각오가 저를 출마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박 전 원장은 지난 4일과

5일 광주와 해남을 방문해 지역민과 언론인들을 만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4일 광주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정치 캠프에 참석해 ‘원로 정치인과 함께하는 정치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했다. 박 전 원장은 특강을 통해 “정치는 우리 삶의 산소와 물 같은 것으로, 우리 생활의 시작과 끝이다”면서 “꿈을 크게 갖고 망원경처럼 멀리 보고 현미경처럼 세심하게 보면서 최선을 다해라”고 당부했다. 특강을 마친 박 전 원장은 해남으로 내려가 매일시장 야시장 개장 행사에 참석해 상인과 지역민들을 만났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정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치 사례 탐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총장은 “정치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직업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미래 국회의 주인공, 10만원 권 화폐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꿈과 자신감을 갖고, 항상 준비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돼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광온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만들자”

민주 원내대표 100일 회견…“노동자 휴식보장법 8월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돈 봉투 의혹이 민주당 쇠신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응은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선 “혁신위 활동이 그런 논란 때문에 무용지물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혁신위가 검토 중인) 대의원제나 공천 문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묻지마 흉악 범죄, 철근 누락 아파트, 이태원 참사 등을 거론하고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회 불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사회 불안은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없앨 수 없다”며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

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 등 국민을 위한 5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비상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 상생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안, 자영업자 부채 문제와 불황형 무역 흑자를 극복할 긴급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을 8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시민 청문회 치를것”

민형배 의원 “질문·제보 환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울) 국회의원이 6일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참여 청문회’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시민의 질문을 직접 다루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청문회란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살피는 과정”이라며 “국회의원이 대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께서 직접 질문한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해주시면 제가 청문회에서 읽거나 질문 영상을 직접 트는 방법으로 최대한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제보도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인문단양, 자녀 학교폭력 문제, 인사청탁과 재산증서 문제 등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된 질문 및 제보는 온라인 설문(https://bit.ly/이동관제보)을 통해 접수한다. 영상은 이메일(mhb196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일은 이달 11일까지다. 민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사찰·언론단양·언론장악의 상징이자 농지법 위반, 배우자 인사청탁 연루, 자녀 학교폭력 은폐까지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후보자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임명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불법 개농장·식용 근절…동물 복지 증진”

이용빈 의원, 동물보호 4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6일 “불법 개농장,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동물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섞은 물을 급여 받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개가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개 도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없어, 광산구 불법 개농장 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위생·관리 상태의 사육이 만



연해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불법 개농장 사육 환경이 동물학대에 해당돼 고발조치에 들어갔지만, 개는 현행법상 소유물이라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 개농장과 개식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 4법” 중 하나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농장·개식용 근절을 위한 최전선에 있는 법안으로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